

● **경영 불가능한 대학 퇴출경로  
법제화**

2006년부터 의학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의 교원 한명당 학생 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교원에는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가 포함된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제주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전국 대학총장 하계 세미나에 참석해 “행정·재정 지원과 연계해 대학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영이 불가능한 대학의 퇴출 경로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대학이 스스로 통합 등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재정 결손을 보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원 한명당 학생 수 40명을 초과하는 대학은 전체 4년제 대학(187개)의 46.5%(87개)며, 특히 사립대의 경우 전체 143개 대학 중 절반인 71곳에 달한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2년 안에 학생 수를 대폭 줄이거나 교수를 늘려야 한다. 2003년 현재 전체 대학의 교원 한명당 학생 비율(의학 계열 제외)은 34명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006년 시작되는 1조 원 규모의 포스트 두뇌한국21(BK21)사업을 비롯해 교육

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의 모든 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볼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국립대의 입학 정원도 점차 축소해 교원 한명당 학생 수를 지난해 31명에서 2009년까지 21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가 배정된 교원 정원을 3년간 채우지 않은 채 교수 채용을 게을리할 경우 해당 정원을 회수해 타 대학에 주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학생 수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밖에 국립대들이 연합해 중복 학과를 통·폐합할 경우 정원 감축분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특히 사립대들이 스스로 학생 정원과 교수를 교환하며 특정 분야를 키우는 노력을 할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 **私學 회계 공개해 이사회 비리  
차단**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회계 비리로 분규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사학(사립대학)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 이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비리견제 장치를 강화하며, 이사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안 부총리는 또 사학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예·결산 등 회계에 대한 감사증명제도를 강화하고, 회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며, 학부모의 감사 청구권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 시행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을 협의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인 이사회에 재단이사장 등의 친인척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지역 인사나 학부모 대표 등이 일정 비율 이사로 참여하는 공익 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시키며, 이사회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 분규 중인 사학이 위원회의 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 **국립대 공동학위제 안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

원부 장관은 서울대 폐지를 전제로 한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에 참석한 안 부총리는 "학벌은 타파해야 하지만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는 권장해야 한다"면서 "서울대 같은 대학이 여럿 생기는 게 좋은 일이며 대학을 묶어 한통속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동학위제란 국립대들이 공동으로 학생을 뽑고 학생들은 원하는 곳에서 수업을 받으며 학위도 공동으로 받는 제도다. 교수들도 기간을 정해 순환보직하기 때문에 서울대의 위상은 지금보다 크게 낮아져 사실상 서울대를 폐지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 부총리는 또 "이는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의 안도 아니며, 소속 위원 중 일부가 제안한 것"이라면서 "사회적 아젠다가 돼 버렸지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에서 정책 대안으로 토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중3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8학년도 대입과 관련해 "내신의 비율을 높이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로로 선발될 수 있도록 길을 넓혀겠다"고 말했다. 내신비중이 커질 경우

'내신 부풀리기'가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내신 부풀리기가 필요 없고, 할 수도 없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 ●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 600억 지원

수도권 소재 72개 대학 중 특성화 계획과 실적이 우수한 25개대 정도에만 올해 총 6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까지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실시했던 공·사립대 특성화 및 국립대 발전계획 추진 사업 등을 폐지하되 지방대는 혁신역량강화(NURI) 사업을, 수도권 국·공·사립대는 대학 특성화 사업을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학생수 1만 명을 기준으로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을 나눠 대학·학부 또는 학과·전공·프로젝트별로 신청을 받은 뒤 대규모 대학은 10곳 가량, 중·소규모 대학은 15곳 정도 등 25개 안팎의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학교별로 50억 원 이내에서 평가결과와 학교규모, 신청금액을 감안해 차등 지원된다. 또 지난해와 달리 산학협력단 설치, 교원확보율 50% 이상을 사업

참여조건으로 새로 만들어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신청을 할 수 없게 했다. 다만, 교수를 증원하거나 학생 수를 줄여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하면 지원자격을 주기로 했다.

### ● 학부모가 교육비리監査 청구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 대학,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대해 학부모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제도안을 공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 및 학부모 단체,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 감사청구권=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나 교육청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학부모 300명 이상이 감사기구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초·중·고교의 경우 학부모가 학생을 대신해 감사를 청구하지만 대학교의 경우 대학생이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직원에게는 학교의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감사청구권을 주지 않

을 방침이다. 하지만 사립대 교수 협의회 등이 감사청구권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구 및 감사 절차=이경운 전남대 교수(법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도 감독청의 일관성, 전문성, 감사인력 등을 감안할 때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의 경우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과 대학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감사 담당 관청은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끝난 뒤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 산자부, 기업수요 맞춰 대학인력 공급

산업자원부는 이공계 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 해소를 위해 ‘산학 연계에 의한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요 업종별로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섹터 카운실)’를 꾸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수요 등을 산출하고, 대학은 이에 맞게 이공계 교과과정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자·기계·e-비즈니스 등 3개 업종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사업을 하반기에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섬유 등 모두 9개 주요 업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산자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가 함께 추진하며, 산자부에는 총괄 협의체가 설치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각 협의체는 앞으로 산업현장과 유리된 일부 기술자격증 제도 및 교육의 개선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업종별 협의체를 지역별 산업집적단지(클러스터)와 연계한 지역 산업별 협의체로 세분화해, 각 지역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해당 지역에서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 ● 대학법인 10곳 사상 첫 퇴출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오랫동안 문을 열지 못한 10개 대학법인이 사상 처음 퇴출됐다. 이는 신입생 모집난으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부실 대학 법인의 퇴출 및 인수·합병

(M&A)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8년 전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26개 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가 어려운 것으로 최종 확인된 13개 법인 중 9곳을 해산하고 1곳은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학법인이 자체 해산하거나 강제 퇴출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개 학교법인 가운데 강북학원 독우학원, 성재학원, 동욱학원, 수운학원, 모정학원 등 6개 법인은 법인 명의의 재산과 이해 관계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

또 비인학원과 경남예술학원, 선교학원 등 3곳은 법인 소유 재산은 있지만 부채가 오히려 더 많아 대학 설립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같은 처분을 내렸다.

현재 중·고교를 운영 중인 B학원은 부채가 370억 원으로 중등학교 운영도 어려워 대학설립이 부적절하다는 해당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했다. 명진학원, 한산학원, 애향숙학원 등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도 대학을 설립

산학협력 중심대학 선정 대학 및 사업명

주관대학	협력대학	사업명
<b>&lt;일반대&gt;</b>		
한양대(인산)	-	학연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기계·신소재·IT)
강원대	원주대·강원전문대	생명·건강혁신 클러스터링 사업(생물·바이오)
영동대	서원대·충청대·청주과학대(전)	충북 이지클러스터 어머너터-CECA(생물·바이오·IT)
호서대	-	반도체·나노·디스플레이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천안산업단지·탕정산업단지(반도체·나노 디스플레이 분야)
경북대	포항공대·영진전문대	산학협력 중심대학 경북대학 컨소시엄사업(전자·기계·자동차)
부산대	창원대	동남권 부품소재 산학협력혁신사업(기계·자동차·조선)
전주대	전주공업대(전)·전북과학대·벽성대(전)·익산대(전)·군장대(전)	첨단 제조기술혁신 산학협력사업(기계·자동차·조선)
순천대	여수대	전남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링 신산학협력 중심대학구축(신소재·기계·우주)
<b>&lt;산업대&gt;</b>		
동명정보대	동명대(전)	녹산공단의 IT융합 기계부품 소재 산학협력 중심대학사업
산업기술대	-	-
상주대	구미1대·경북과학대(전)	경북 서부지역 산업·농공단지의 경쟁력 제고 및 산학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서울산업대	-	나노·마이크로 제조장비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차세대 NIT 제조장비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한밭대	-	대전지역 기술집약형 산업 혁신 산학클러스터 구축사업

하지 못하면 법인 해산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설립인가 때 건물 땅 교수인력 등 양적 요건만 따지던 것을 설립목적 학칙 학교현장 출연금 등 질적 요건도 심의하도록 최근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앞으로 대학법인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해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산학협력 중심대학'  
13곳 선정

산학협력을 제대로 하는 곳에 5년간 2000억원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한양대, 강

원대 등 일반대학 8곳과 산업기술대, 서울산업대 등 산업대 5곳이 선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별 산학협력 체계의 구축·확산에 나설 선도대학으로 13개 대학을 뽑아 발표했다.

정부는 선정된 대학에 일반대는 30억~70억 원씩 매년 300억 원, 산업대는 10억~40억 원씩 매년 100억 원을 앞으로 5년간 지원한다. 이 사업비는 산학협력체계(40%), 기술개발(40%), 장비구축(40%), 인력양성(20%) 등의 용도로 중심대학이 자율적으로 편성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은 교과

과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산학협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특성화 학과 육성 계약형 학과제 도입 산업체 위탁과정 도입 산업계 출신 교수 임용 공학교육 인증제 도입 등 교육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 기업인, 대학서 강의...  
교수는 기업서 연구

내년부터 기업 임원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대학 교수가 기업에서 연구하면 1인당 1천만원이 지원된다. 또 정부가 대학 지원사업을 벌일 때 기업체 근무 경력을 가진 교수를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학·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실무지원팀을 만들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팀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국장과 삼성전자와 LG전자, SK 등의 인사담당 상무가 참석해 ▶대학, 기업간 인력교류 ▶교육과정 개선 ▶해외인력 유치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경련은 내년 1학기부터 기업 임원과 대학 교수 1백여 명을 뽑아 이들이 상대 대학이나 기업에서 6개월~1년간 일할 수 있도록 각각 1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교환

근무를 원하는 교수와 임원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10억원의 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경련이 절반씩 출연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산학협력 대학 지원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지원대학을 선정할 때 담당 교수가 기업체 근무경력을 가졌을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키우기 위해 대학(원)생 장기인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 이공계 대입전형 자율권 확대

오는 200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각 대학은 대입전형 과정에서 이공계 지원자를 대상으로 수능을 보완하는 수학·과학 능력시험을 자율로 개발해 치를 수 있게 된다. 또 공공 연구기관에서 여성 과학기술인을 일정 비율 이상 뽑는 여성채용 목표제가 확대 시행되며, 직급별로 일정 비율 이상 승진시키는 여성승진 목표제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등 13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

위)를 열어 이공계 대학의 자율 선발권 확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등 과학기술 정책 관련 14개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 이공계 대입 대학별 수학·과학시험 도입=현재 중학교 3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08학년도부터 이공계 대학의 자율 선발권을 확대해, 각 대학이 모집계열별로 논술·심층면접·실험·실기 등 측정도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지원자의 수학·과학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입시 전형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필답고사 형태의 본고사는 금지된다.

과기부는 “장기적으로는 현재 수능 중심에서 벗어나 고교의 수학·과학 교육과정 이수기록을 이공계 대입 전형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교의 수학·과학 교육을 실험·탐구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는 한편, 고교와 대학 교육의 연계를 강화해 고교생이 대학에서 개설하는 ‘전문 교과과정’(AP과정)을 미리 이수하거나, 대학이 고교에서 이수한 전문과정 교과목을 시험(PT시험)을 거쳐 인정하는 제도의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학·과학 능력을 대학이 자율로 측정한다

고 해서 본고사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고사를 금지하는 현재의 대학입학 전형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들은 정부안을 환영한다는 태도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방법과 평가방식이 다양해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시행과정에 과학교 학생들에 대한 특혜나 본고사 부활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인옥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은 “대학과 고교 교육을 연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대학이 학생 선발방식의 자율권 확대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승진 대폭 확대 = 공공 연구기관에서 여성 과학기술인을 직급별로 일정 비율 이상 승진시키는 여성 승진 목표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여성 과학기술인이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과 경력 단절로 재취업과 승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세부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25곳의 인력구성을 보면, 여성은 연구원급이 15.3%, 선임급 6.8%, 책임급 2.6%, 연구위원급은 고작 0.3%이며, 여성 기관장

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부는 “아직 직급별 승진 비율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여성 기관장이 한 명도 없는 과학기술계의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도 목표를 현행 10% 수준에서 최대 30%까지 높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2006년까지 15%, 2010년까지 20%를 목표로 확정했다.

● **대학입학전 포기뎌 등록금 모두 반환**

앞으로 대학 신입생이 등록금을 낸 뒤 입학 전에 등록금을 포기한 경우 등록금의 10%를 떼이지 않고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300만 원의 등록금을 낸 후 다른 대학 추가합격 등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못할 땐, 30만 원을 뎌 나머지를 돌려 받았다. 따라서 몇 차례 추가합격이 되풀이되는 경우에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아 등록금 공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입시 제도에서 대학 측은 신입생이 입학 전 등록을 포기하더라도 추가 모집을 할 수 있어 등록금 일부를 공제할 이유가 없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학기가 시작된 후 자퇴 등에 따른 수업료 반환액 산정 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학기 개시일부터 경과일을 따져 1개월 이전이면 수업료의 6분의 5를,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전까지는 6분의 4를,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전까지는 6분의 3(절반)을 각각 반환 받을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 **약대 6년제 2009년 시행 ...**

**약 · 한의계 합의따라 개선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오는 2009년부터 약대 6년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상반기 중 약대 학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년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약대 학제 개선안은 오는 2009학년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약대 학제 개선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약제 · 한의계 간 약대 6년제 추진 합의를 근거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돼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약대 학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교육과정 · 약학교육 전문가, 보건경제 · 보건정책 전문가, 의대 교수 등으로 이뤄진 정책연구진을 구성했다.

연구진은 올해 말까지 약대 학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교육전문가와 관련된 단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 **이공계 병역특례 4년에서 3년으로**

정부는 2008년까지 중소 · 벤처기업 1만 개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06년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과 같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10개를 선정해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 51회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방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5대 분야 30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으며, 이

###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주요 과제

#### 주요내용

- 2008년까지 중소·벤처기업 1만개 육성  
- 공공부문 벤처창업지원
- 2006년까지 연구중심 대학 10개 선정, 육성  
- 대학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15% 투자
- 2007년까지 핵심 연구인력 1만명 확보  
-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 지속 실시
- 2006년 과학영재교육 확대 및 병역 특례 혜택
- 2007년까지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 및 우주 센터 건설  
- 경량 전철 및 고속철도 시스템, 지능형 교통 운영체계 구축
- 정부 출연연구기관 육성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담당  
- 기본 사업비 비중 2008년까지 50%로 확대
- 2007년까지 공학교육 인증제 확대
- 2005년까지 새로운 과학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올해 말까지 연구개발(R&D)특구 지정

자료=과학기술부

에 따르면 '과학기술 입국(立國)'을 위한 정부 정책이 크게 바뀐다.

핵심 내용은 중소·벤처기업과 이공계 대학의 정부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연구·개발(R&D) 분야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공위성 사업 등 대규모 과학기술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1만 개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적극 사 주는 분야를 현재 국방에서 전력·가스·철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R&D 분야에 대한 조세 감면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12년까지 세계시장 1위 제품을 200개 이상 만든다

는 목표다. 기술 수준도 현재 선진국 대비 60%인 것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공계 대학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06년까지 연구중심 대학으로 선정되는 10개 대학에 대해서는 학부 정원을 축소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연구비도 이들 대학에 집중 지원해 기업과 국가의 성장 동력에 필요한 기술이 개발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R&D 예산 중 대학에 지원하는 비율도 현재 10.4%에서 15% 선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을 돕기 위해 병역특례기간 단축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등 과학영재에게는 병역특례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공계 대학원 출신자에게는 올 하반기 중 병역법을 개정해 병역특례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앞으로 '과학기술 중심사회 추진기획단(단장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맡아 시행한다.

### ● 교수채용 심사기준 미리 공개기로

앞으로 대학이 새로 교수를 뽑을 때는 심사 기준을 미리 공개해

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중순 이를 공포, 이후 공고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교수를 새로 뽑을 때 채용 분야·채용 인원·지원 자격 등을 지원 마감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했지만 심사 기준은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 개정안은 여기에 심사 항목과 항목별 배점 등 심사 기준까지 공고하되 그 기준을 채용심사가 끝날 때까지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했다.

### ● 대학 이공계 연구 15곳 2008년까지 500억 지원

기초과학이나 원천기술, 바이오신약 등을 연구하는 대학부설 이공계 연구소 15곳에 5년간 5백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공계 대학 연구소 지원사업"에 신청한 전국 51개대, 151개 연구소 가운데 13개대, 15개 연구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수의과학연구소)와 건국대(생명·분자정보학센터, 인공근육센터)는 각각 2개 연구소가 뽑혔고 고려대(나노과학연구소), 한양대(디스플레이공학연구소), 성균관대(고분자기술연구소) 등도 지원받게 됐다. 이들 연구소에는 올해부

터 2008년까지 5년간 연구소당 5억~10억 원씩 매년 1백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연구소는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공공부문이 7곳 ▶지역특화 분야가 2곳 ▶지능형 로봇, 바이오신약,장기, 디스플레이 등 10대 성장동력산업 분야가 6곳이다.

● 지방연구중심대학, 6개 대학  
1차 평가 통과

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2단계 평가 대상에 부산대 전남대 등 총 6개 대학 8개 사업단이 최종 진출했다.

과기부는 광주과기원의 '나노광·전자소재 및 소자연구사업단(단장 이재석)', 부산대의 '실버바이오 신약사업 기반연구사업단(단장 유미애)' 과 차세대 물류 IT 기술연구사업단(단장 홍봉희)', 전남대의 '전통재료와 첨단공법을 융합한 바이오하우징개발연구단(단장 송진규)', 전북대의 '지능형자동차 전자정보기술사업단(단장 김형석)' 과 '헬스케어기술 개발사업단(단장 김학용)', 포항공대의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사업단(단장 이진원)', 충북대의 '충북 BII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단(단장 김남)' 등이 최종 선

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 선정은 전국 8개 권역 16개 대학 28개 사업단의 신청을 받아 IT, BT, 에너지소재, 복합 등 4개 패널별로 10~12명의 평가위원의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2차평가는 8월 24일~25일 이틀동안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사업대학 최종 선정 발표는 9월 중순쯤 이루어질 예정이다.

● 울산 국립대,  
중규모 특성화 대로 가닥

노무현 대통령이 울산 지역에 국립대학을 설립하는 문제와 관련, 대학 성격과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적시하고 청와대에 별도 자문기구를 두겠다고 밝혀 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 이를 추진해온 울산시 추진 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울산지역 국립대 설립 문제와 관련, "이는 합리적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것이다"며 "대통령 산하에 별도 자문기구를 뒤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면 대학교가 넘치지만 분권적 입장에 따라 울산의 입장에서 보면 모자라는데 안 해

주는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생각할 게 많아 우물우물 해왔다"면서 "지금까지는 대학교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추진위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를 확대 개편해 대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새로 만들 어질 대학 성격에 대해 "중합백화점식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울산에 적합하고 울산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고 하면 의견이 나뉘질 수 있고 그게 정상"이라고 지적, 중규모 내외의 특성화된 대학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을 유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그런 것을 놓고 작업이 진행되면 저는 청와대에,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로 울산 국립대학설립위를 만들겠다"면서 "울산이 한발 앞서가고 정부가 한발 뒤쳐져가면서 안을 만들고 참여해 의견을 조정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학 설립에 따른 비용 조달과 관련, "울산에서 많이 부담하면 할수록 좋겠고 이제 공약이행은 결정한 만큼 어



느 규모로,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협상하는 자세로 해나가면서 가장 효율적인 대학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노 대통령이 밝힌 발언에 주목하면서, 울산에 들어설 국립대학의 성격과 지역 특성을 파악하는 등 관련 규정과 예산에 대한 검토 작업을 착수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 취지에 비춰볼 때 울산시가 대규모 종합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역 특성에 근거한 중규모 내외의 특성화된 대학 설립 계획을 세울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 모든 대학에 취업전담기구

내년에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에 진로 및 취업 지원을 담당할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업무를 통합하고 졸업예정자 위주의 취업지원을 신입생까지 확대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히 전담기구를 두는 대학에 대해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 때 취업률 항목의 비중을 높이거나 별도의 항목을 개발해 반영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인력개발센터(가칭)' 설치 운영계획을 마련, 전국 350여개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각 대학은 현재 대부분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부서를 통합·확대해 '종합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진로교육상담팀, 취업정보지도팀, 진로활동관리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되며 학년별 체계적인 진로개발 프로그램 운영 취업정보 수집 및 취업정보망 운영 진로선택에 관한 정보 및 상담 제공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창회나 지역 산업체, 지역대학협의회 등과 협약 등을 맺어 현장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취업정보 수집기능과 함께 졸업생의 진로활동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도 하게 된다.

각 대학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상담원을 채용하는 등 인력을 확충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노력을 우선 기울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취업지원부서를 독립기구로 둔 4년제 대학은 20여 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대학은 학생처나 산학협력처 등의 소속 부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인원

도 1~3명에 불과해 진로지도나 취업지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 장애학생 특별전형 늘린다

정부가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대학을 '특별' 지원하고,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를 조사해 각종 재정지원사업 관련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장애학생이 학습능력에 따라 학점을 신청하고 그 학점에 맞춰 등록금을 내는 학점등록제를 도입한다. 이는 지난 '95학년도부터 대입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했지만, 일부대학만 형식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장애학생 입학 숫자가 미미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대학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시행·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이의 실천 결과를 지도·점검하는 등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를 올해를 시발로 3년 주기로 실시, 그 결과를 각종 재정 지원 관련 대학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대학당국의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의 경우 시설 투자

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평가 및 재정지원을 통해 자율적 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까지 590억 원을 투자, 대학 층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도우미, 교수·학습자료 제작 보급 등 학습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대학생이 학기당 최저학점을 비장애학생과 다르게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능력에 따라 수강하되,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내게 해 졸업연한이 늦춰지는 것에 따른 손실은 없도록 하는 '학점등록제'를 시행한다. 또한 대학이 학부제를 실시하거나 광역단위로 모집하는 경우 장애학생이 본인의 적성과 희망등을 고려해 전공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 **대학별 취업현황 공개 추진...  
학과단위까지...대학순위파  
괴·구조조정 촉진될 듯**

대졸자의 취업현황을 출신대학과 학과(전공)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

육인적자원부는 수험생과 기업 등 교육 수요자들이 각 대학의 취업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진학·진로, 취업·채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대학 취업실태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대졸자의 취업현황을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하고 있으나 개별 대학의 반발과 통계법상 제약 등으로 전체 대졸자 취업률과 출신지역별, 진출 산업 및 직업별 취업률 등 두루뭉술리한 실태만 공개해 실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출신대학과 학과(전공)별 취업률이 공개될 경우 기존의 수험생 수능성적이나 국가고시 합격률 등에 의해 서열화된 대학 순위가 무너지고 영문학, 법학 등 사회적 수요에 비해 배출인원이 지나치게 많은 학과(전공)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술교육대, 포항공대 등이 100%, 건양대, 동양

대, 동서대, 인제대 등의 지방 소재 대학들이 8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한 반면 서울대는 취업률이 46.5%에 그쳐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학 순위와 실제 취업률 순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각 대학과 전공별 취업실태가 공개되면 대학과 기업이 인력 수요·공급을 파악해 대학교육에 활용할 수 있어 학과 통·폐합이나 교육과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단 대학이 공개를 요청하는 학과(전공)나 전공별 상위 순위의 학교를 선별, 발표하는 방안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각 대학이 자체 집계해 제출하는 취업률 실태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조사기관에 의뢰, 올해 취업률 조사 대상자 52만여 명 중 1600여 명을 실제 전화조사해 검증과정을 거치는 등 신뢰도를 높인데 이어 내년에는 대학원 졸업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밀 취업통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학교육